

보도자료

보도일시 [지면보도] 2020년 2월 27일(목) 조간부터 가능
[인터넷 기사] 2020년 2월 26일(수) 12:00이후 가능

[연구관련]
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044-287-6222, leesh99@kli.re.kr)
담 당 자 신현구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 평가기획팀장
(044-287-6407, shin@kli.re.kr)

김대호 한국노동연구원 홍보전략팀 팀장
(044-287-6041, helcyon@kli.re.kr)

배포일시 2020년 2월 26일(수) 09:00

사회서비스 활성화의 고용 효과 분석

- 사회서비스원과 커뮤니티케어 확대는 고용 창출과 종사자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됨 -

□ 연구 개요

-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과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활성화 정책이 고용의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음

□ 사회서비스 활성화 정책의 배경

- 한국의 사회서비스는 초기 외국 원조 기관과 민간의 자원에 의존하여 소수의 취약집단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지원에 초점을 두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는 사회구조적 변화로 인한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어려웠음
- 2000년대 중반 이후, 바우처 공급방식의 도입으로 사회서비스 시장이 조성되면서 사회서비스 공급량이 큰 폭으로 확대되었으나, 영세한 제공기관의 시장 진입으로 부실기관 증가, 종사자의 처우 악화, 서비스의 질적 하락 등의 문제가 제기됨
- 정부는 2017년 10월,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공공부문에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명을 확충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였음
- 사회서비스의 활성화 정책은 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공급을 주된 목표로 하고 있지만, 공공부문의 서비스 공급 비중을 확대하

는 과정에서 사회서비스 산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효과에도 적지 않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의 경과

-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공성·투명성 제고,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및 전문성 향상을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체계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더 나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기존에 민간법인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해 온 국공립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장기요양, 노인돌봄, 장애인 활동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재가 센터를 신규로 설립하여 각종 재가서비스를 제공함
-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은 시도 단위에서 시도지사가 특수법인(공익법인)의 형태로 추진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2019년 4개 지역(서울, 대구, 경기, 경남)의 시범사업 운영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17개 시·도로 확대될 예정임

□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의 경과

- 커뮤니티케어는 기존에 분절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온 한계를 극복하고, 서비스 제공기관들의 연계, 특히 보건과 복지, 주거 서비스 간의 연계를 통해서 이용자가 거주하던 지역에서 계속 머무르면서 통합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 2019년 6월부터 8개 기초지자체에서 노인(5)과 장애인(2), 정신질환자(1)를 대상으로 하는 선도사업이 각각 시작되었으며, 8월에는 노인 대상 선도사업으로 8개 지역이 추가 선정되었음
- 2019년은 1단계로서,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하고, 서비스 제공 모델을 검증·보완하면서 다양한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개발하는 시기에 해당하며, 2026년 3단계에서는 커뮤니티케어의 보편화를 달성한다는 목표로 사업이 확대될 계획임

□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특성

-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2016년 366.6만명, 2017년 381.2만명 수준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일자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도 요양 및 돌봄서비스 관련 일자리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돌봄서비스 일자리는 고령의 저학력 여성 종사자의 비중이 높고, 임금 수준이 낮으며, 임시직과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높다는 특성을 보임
- 따라서 돌봄서비스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고용의 증가는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평균적인 근로조건을 낮추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서비스 활성화 정책이 추진된 배경으로 작용하였음

□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의 고용 효과

- 사회서비스원의 도입은 직접적으로 공공부문에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일자리를 창출하며, 창출된 일자리는 사회서비스 노동시장의 신규 진입자 채용, 위탁 운영하는 기관 종사자의 고용 승계 및 기존 민간부문 종사자의 이직으로 채워짐
- 설문조사에서는 고용승계가 45.6%,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이직이 35.5%, 신규 진입자가 18.9% 수준이었으며, 전체 사회서비스 산업 내에서의 고용효과는 민간 제공기관에서 공공부문으로 이직한 자리를 얼마나 채우느냐에 따라 달라짐
- 정부 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사회서비스원을 전국을 확대하는 경우, 사회서비스 산업에 신규로 진입한 종사자가 0.7만명, 민간부문에서 이직한 종사자가 1.7만명 수준으로 예상됨
- 사회서비스 공급이 수요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민간부문의 고용 감소는 미미한 수준일 것으로 추정되므로, 사회서비스원의 확대는 고용 규모를 2.0-2.4만명 정도 증가시킬 것임
- 또한, 사회서비스원의 확대로 창출된 공공부문 일자리는 민간부문에 비해 질적으로 개선된 특성을 보임. ex) 사회서비스원 종사자는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 비중이 높았고, 특히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종합재가센터는 재가서비스 종사자를 월급제로 고용하는 획기적인 변화를 시도

하고 있음

- 따라서 사회서비스원의 확대로 공공부문에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수록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될 것임

□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의 고용 효과

- 커뮤니티케어는 시군구에 지역사회통합돌봄팀을 신설하고, 지역케어회의를 운영하며, 읍면동에 케어안내창구를 설치하였지만, 소수의 인원만 기존 인력 위주로 배치하였음
- 이 사업은 지자체가 직접 종사자를 채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의 분절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연계하여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임
- 아직은 사업 초기단계라 민간 제공기관에서의 구체적인 변화가 관측되지는 않지만, 지역 내 다양한 민간 제공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새로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확인하였음
- 커뮤니티케어를 통해서 지역의 민간 제공기관이 안정적인 서비스 수요를 확보하게 되면, 서비스 종사자를 추가로 고용하거나 기존 종사자의 소득이 증가하는 변화가 나타날 것임
- 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예상되며, 이러한 변화들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증가 및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

- 사회서비스원의 추가적인 확대가 고용 창출에 도움이 됨.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 규모를 고려하면, 공공부문의 서비스 공급이 확대되어도 민간 서비스 시장의 고용은 크게 감소하지 않을 것임
- 사회서비스 수요를 안정적으로 충족하기 위해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과 상생·협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민간 제공기관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지원이 도움이 될 수 있음
- 사회서비스원 내에서 지역별·기관유형별 고용의 질적인 차이를 줄이기

위해, 사회서비스원 내 직무에 대한 인력 기준, 고용조건의 기준, 경력 인정 기준 확립이 필요함

- 커뮤니티케어의 확대 과정에서 사회서비스원과 같은 공공부문 서비스 인프라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함
- 장기적인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사회서비스의 질적인 개선이 요구됨

끝.